

제공일자	2013. 9. 4 (수)	담당자	강성호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33, 010-7359-2850
			총2매

제목 :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대응 전략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강성호 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『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본 사적연금 대응과 시사점』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(해외보험동향 2013년 여름호 테마진단).
- 현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추진은 연금시장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대응 방안을 모색이 필요
 - 기초연금 도입으로 연금사각지대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불안정, 후세대부담 문제로 공적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음.
 - 이에 선진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 대응 전략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 공·사 연금의 상생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.
- 고령화, 재정 불안정은 선진국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이 되었고, 대부분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통한 공·사연금 상생전략을 추구함.
 - 영국은 국가이충연금(S2P)을 2030년까지 정액연금화하는 등 공적연금 기능을 기본적 노후소득수단으로 축소하고, 자동가입 개인계좌 기업연금제도(NEST, 2012년 시행)를 통해 준강제적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함.
 - 미국은 1890년대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종류의 사적연금이 개발되는 등 공적연금의 한계를 사적연금과 사적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여 오고 있음.

○ 일본은 1980~1990년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, 2000년 이후 신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다양한 보험규제 완화(예, 2002년 개인연금의 방카슈랑스 허용 등)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함.

○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, 재정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(예, 급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) 하고, 세제 혜택과 결부한 리스터연금 도입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함.

□ 향후 초고령화 및 재정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·사연금의 적정 역할 분담 및 사적연금 기능 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○ 공·사연금 역할 분담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(1단계), 다음으로 공·사적연금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며(2단계), 마지막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(세제 및 보조금, 지급보장제 등)이 따라야 할 것임(3단계).

○ 또한, 세제(보조금 포함) 혜택 강화형(독일 등) 및 준강제형 사적연금 제도 도입(영국, 스웨덴 등), 저소득층 및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연금 상품(미국, 일본 등) 개발로 사적연금 강화형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요구됨.

※ 첨부 : 테마진단 “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 대응 전략과 시사점”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